

글. 홍진기,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구축방안



from Regions to the Global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권역 내 혁신자원의 광역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간 행정적 칸막이를 뛰어넘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하이권이나 도쿄권 등과 같은 해외 광역경제권과 경쟁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 서론

클러스터는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존재할 수가 있으므로 기업, 대학, 협회 등 클러스터 요소 간의 상호의존성 및 연계는 공간적으로 매우 분산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이 동일 클러스터보다는 인근 지역의 클러스터 내에 속한 기업이나 연구소들과 오히려 더 강한 연계를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3개 클러스터(북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의 지역 내와 지역 간 연계를 분석한 사례연구에 의하면 지역 내의 연계보다 국가적인 전후방 연계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의 상호보완성 또는 지역 간 협력의 측면에서도 클러스터의 참여주체들은 상호의존성 또는 보완성으로 연결되어 경쟁과 협력을 통해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클러스터 내에 분화된 생산단계별로 특화된 전문 기업이나 기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존립기반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야 한다. 단일 클러스터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산업 활동 또는 산업지원활동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은 예산집행, 사업시행, 성과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단위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도 혹은 시·군 단위에서 시행되는 특정 지자체의 사업에 다른 지자체의 경제주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기업체의 경제활동 범위와 행정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혁신자원의 광역적 이용과 ‘경쟁과 협력(C&C: Competition and Cooperation)’을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권역 내 혁신자원의 광역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간 행정적 칸막이를 뛰어넘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해권이나 동경권 등과 같은 해외 광역경제권과 경쟁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부처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사업들을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고, 관련 지자체 간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기존의 중앙부처 혹은 시·도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로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뿐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역경제권 내 관련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상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평가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추진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광역경제권은 단일 행정조직이 관리할 수 없는 공간적 범위를 갖기 때문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총괄하는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추진체계를 필요로 한다. 광역경제권 사업의 새로운 추진기구는 사업의 기획·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운영은 하위 기관에 위임하되 사업비 배분 권한을 가짐으로써 클러스터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기능에 중점을 두고 사업운영 기능은 기존의 특화센터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 설립되어 있는 특화센터(시스템 연계기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관 간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연계기관은 기술지원, 생산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얼 서비스(real service)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경제권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기구 산하에 각 시·도별로 한 개의 테크노파크를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기업 간 연계를 위한 중개(brokerage)기능과 ‘기업지원을 위한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구도 하에서 테크노파크는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는 기업지원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는 기획·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통해 테크노파크 중심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광역경제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른 기업 혹은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원하고 있지만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적합한 파트너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테크노파크의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특화센터는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서 그간의 축적된 조직역량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광역경제권 내에

는 동일 산업 분야에서 수 개의 특화센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모 방식에 의해 산업 혹은 기능적으로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배분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쟁과 협력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추진기구의 설립 및 구성방안

### 대안의 검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전담할 추진기구의 구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우선 시·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시·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추진기구는 현재의 행정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며 시·도의 자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도간 협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강력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시·도간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 협의기구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권한만을 갖게 되며 집행기능은 보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획의 수립과 조정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과 조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기구의 구성원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임직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역민 등의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추진기구의 구성방식으로는 자치단체조합 방식이 있다. 이는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법상의 법인인 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까지도 수행할 수가 있다. 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인격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 및 시·도에서 이양한 사무의 범위 내에서 기속력 있는 계획 수립 및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할 경우 통상적으

로 해당 시·도에서 동등한 비율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됨으로써 ‘나눠먹기’ 식 사업 추진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관련 시·도가 동등한 비율로 추진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조합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제약할 가능성과 입법기술상의 어려움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 형태가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해 설립된 집행기구는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강력한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며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대안별 장·단점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추진기구 설립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도 협의기구 방식은 현행 법·제도의 틀 내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의기구라는 성격상 광역경제권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격상 관련 시·도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조합 방식은 중앙정부 또는 시·도에서 이양 또는 위임한 사무의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과 집행의 통합적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할 수가 있고 입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도의 관련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에 의한 집행기관 설립방식은 계획 수립과 집행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특별법 등에 의해 집행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표 3-1 ● 추진기구 구성방식별 장·단점

	장점	단점
시·도 협의기구 방식	최소한의 제도 개편으로 시행 가능	최소한의 권한만 보유 강력한 정책추진이 불가능
자치단체조합 방식	계획 수립과 집행의 통합적 수행	시·도 등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법에 의한 집행기관 설립방식	정책의 효과적 추진 강력하고 전문적인 집행기구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

## 추진기구의 설립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 대안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볼 때 법에 의한 집행기관 설립 방식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집행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올해 당장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사업을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중립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진기구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반대급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추진기구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기획, 사업 선정,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추진기구의 인력은 광역경제권 내 기존 조직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단장 및 핵심 인력의 일부는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직의 파견 인력은 소속된 시·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파견인력만으로는 기획 및 사업비 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파견인력은 실무 요원으로 활용하고 핵심 업무는 공모를 통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프로젝트 디렉터(project director)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도산업 추진기구는 광역위원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위원회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광역위원회는 예산 집행기능이 없으므로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선도산업 추진기구의 사업내용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추진기구와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권역별 선도산업 추진기구 간의 연계 강화와 메타 평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광역경제권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전체 사업의 평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추진기구의 운영방안

광역경제권 단위의 효율적인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각개 약진식 정책 집행과 지자체내 소관 부서 간의 협력 부족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클러스터 연계체계 구축과 혁신자원의 효율적 확충 및 활용을 위해 '경쟁과 협력'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sup>1)</sup> 현재 지역사업의 추진체계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개별사업의 구조로 이루어진 계층형 추진체계를 갖고 있어, 동일 지역 내에서 유관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업 간 연계 및

1) 클러스터의 형성 및 기반구축단계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중시하는 계층형 추진체계가 선호되지만, 산업 발전의 도약 및 성장 단계에서는 '상호 경쟁과 협력'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추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보교류가 미흡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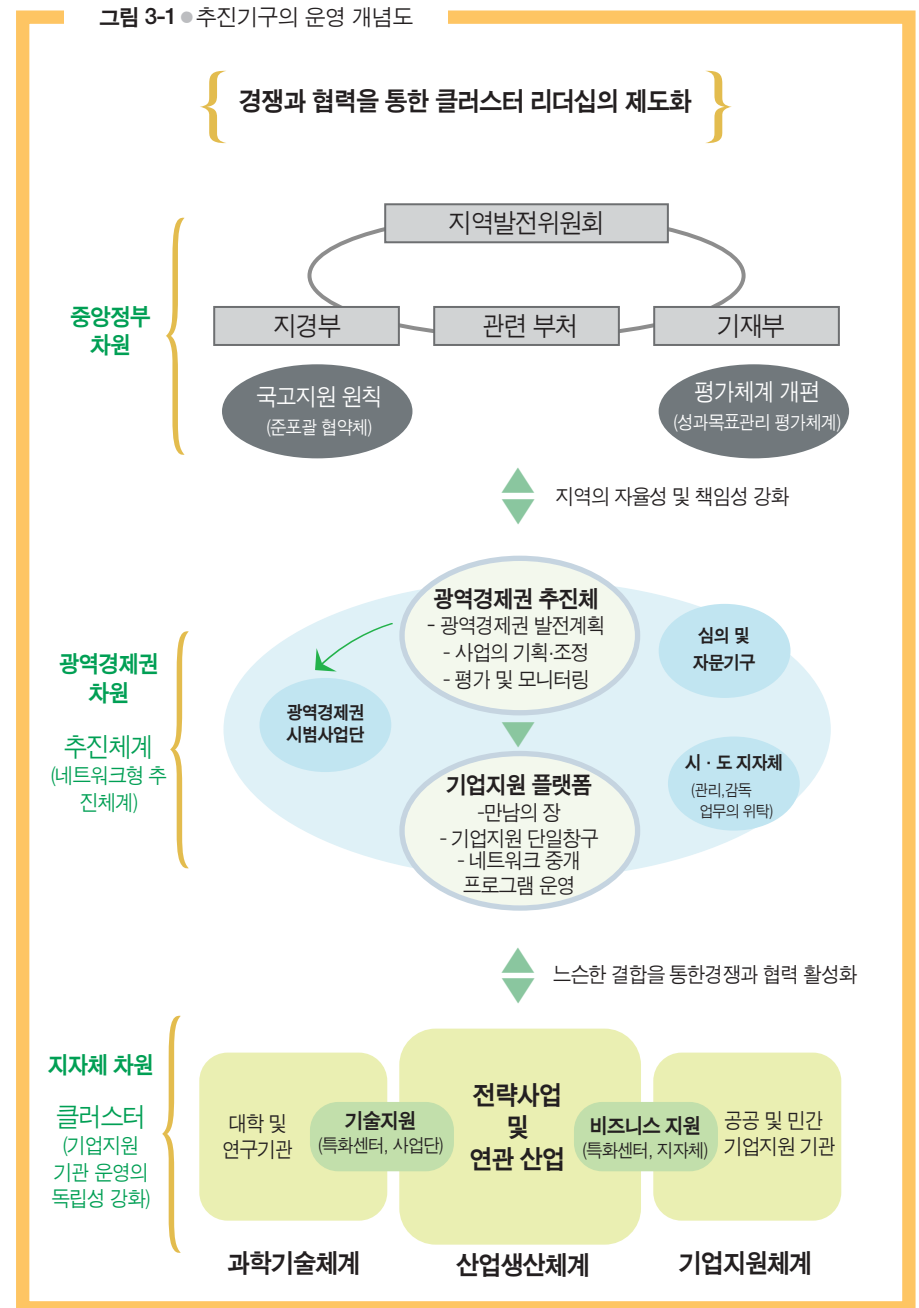
네트워크형 추진체계는 광역경제권 사업의 기획·조정 기능과 사업운영 기능을 분리하여 광역경제권 내의 지자체 간, 지자체 내 각종 혁신지원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기획·조정 기능과 사업 운영기능의 유기적인 접합과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의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지원 플랫폼은 ‘만남의 장’, ‘기업지원 단일 창구’, ‘중개협력 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클러스터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정착함으로써 클러스터의 효율적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규모가 확대되고 성장단계로 들어서려면 개인 및 특정 기관에 의한 리더십<sup>2)</sup> 보다 기업지원 플랫폼과 같은 혁신주체 및 클러스터 간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된 조직적인 클러스터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만남의 장’ 프로그램은 포럼, 연구회 운영과 같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대학, 지원 기관 등의 혁신주체 간의 신뢰와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통해 클러스터의 발전 비전 및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클러스터 및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과 의견 수렴 등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지원 단일 창구’ 기능은 기업지원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와 같은 지역산업 전문가에 의해 연결시켜 줌으로써 클러스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과 지원기관 모두가 부담해야 할 협력 및 지원 파트너에 대한 탐색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클러스터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중개협력 지원 프로그램’은 기술지원, R&BD 사업화,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스타기업 육성, 기술지주회사 운영 등과 같은 개별 클러스터의 특성에 적합한 특성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기업지원 플랫폼은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존 지원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여 광역경제권의 여건에 맞추어 미래 선도산업 플랫폼, 지역 주력산업 플랫폼, 농업 및 지역산업 플랫폼 등으로 전문화하여 복수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경

2) 개인 및 특정 기관 중심의 리더십은 클러스터의 발전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 클러스터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게 된다.

그림 3-1 ●추진기구의 운영 개념도



제권의 여건에 따라서는 시·도 지역의 주요 클러스터 군을 대상으로 지사 형태의 조직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지원 플랫폼이 운영될 경우 기존의 지원기관(특화센터)은 전문화된 기업지원 기능으로 특성화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들 지원기관(특화센터)은 연구기관, 대학 등과 같은 기존 전문기관들과 느슨한 결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여 광역경제권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평가체계 구축방안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 정책은 상향식의 분권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산업정책과 같이 복합적인 목표를 갖는 경우에는 사전평가 과정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정책목표의 명확한 위계구조와 구체화된 하위 정책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결과가 차기 정책기획에 반영되어 정책효과가 개선되고 사업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리·평가시스템의 연계구조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전담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진도 관리, 현장 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이 나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별사업의 실적 평가에 치중한 나머지 산업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기법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별사업·단기적 성과 위주 평가로 인하여 종합적·장기적 성과 측정이 곤란하며 지역별·산업별 관점의 특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 및 혁신역량 제고 효과, 산업클러스터 형성 효과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보다 사업주관기관의 추진실적 위주로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 단위의 중앙집중식 평가, 지역의 사정에 어둡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현장성에 기반을 둔 상시적 모니터링 미흡, 사업단위별·연차별 평가에 따른 행정적 낭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획 수립체계에서는 상향

식의 분권적 거버넌스가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의 하향식 거버넌스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별 추진사업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적·종합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평가체계는 사업의 기획·선정·집행·평가 등 사업 추진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기획평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모니터링,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목표·실행·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과 광역경제권으로 평가내용의 계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모든 평가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평가결과는 단지 참고자료에 그칠 뿐 중앙차원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앞으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광역경제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과평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과 광역경제권별 평가시스템을 계층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의 단위사업 평가는 광역경제권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관련한 성과지향적 통합평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주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도산업 추진기구가 중심이 되어 광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성과목표관리방식 체계화가 필요하다. 중앙과 지역 간의 평가체계를 계층화하고 중앙이 성과중심의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관리방식을 체계

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발전계획의 발전 시나리오에서 단계별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이 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성과 목표관리방식(management by performance objects)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목표관리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차별화하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시기와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평가 결과의 명확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결론

민족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급진전하면서 광역경제권 이 지역정책의 주된 공간적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 개발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지역경제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역경제권이 2~3개의 광역지자체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 추진에 있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인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이 과거 시·도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사업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법에 의한 집행기관 설립방식으로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한시적 성격의 추진기구 설립을 제안하였다.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선정, 평가를 통한 사업비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사업운영은 지역 내에 기 설립되어 있는 특화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사업 주관기관에 대한 평가와 사업비 배분 권한을 통해 클러스터 리

더십을 확보하되 전담기관의 메타 평가를 통해 그 자체의 사업성과를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경쟁과 협력'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네트워크형 추진체계에 따라 광역경제권 내 혁신지원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한정된 인력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원 플랫폼은 기존의 테크노파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 평가는 일관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과 광역경제권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성과목표 관리방식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지표와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시·도 단위의 소규모 전략산업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 시·도 혹은 사업주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대승적 목표를 향해 권역 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만 사업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